

인천시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시사점

채은경 |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유근식 |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배경과 목적

- 인구는 경제의 성장동력과 재정 여력, 국방·교육·의료 시스템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이며, 장기적인 정책의 설정에 있어 인구 변화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
- 통계청은 장기적인 정책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미래 인구 변화를 예상하는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시도별 장래인구추계가 발표되어 2052년까지의 인천시 인구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발표된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향후 30년간 예상되는 인천시 인구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정책제안

- 저출생 추세 완화를 위하여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돌봄시스템 구축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을 검토
- 중앙정부의 변화에 대응하여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의 위상을 상향 조정하고, 해당 조직을 바탕으로 선제적 인구정책 발표 후 중앙정부가 따라오도록 하는 전략 설정이 필요함
-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활용성을 제고하고, 고령층의 평생학습 생태계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복지와 통합돌봄 시스템을 강화
- 신도시 건설 및 도시 재생과 같은 도시관리를 통해 인구 확보 역량을 강화하고, 군·구별 인구 불균형에 대응한 지역 특화 정책을 지속 발굴 및 추진

1 인천시 인구구조 현황

1. 연구 개요

- 인구는 경제의 성장동력과 재정 여력, 국방·교육·의료 시스템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이며, 장기적인 정책의 설정에 있어 인구 변화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
- 통계청은 장기적인 정책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장래인구추계를 발표
 - 장래인구추계는 기존 5년 단위로 발표되었으나,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2019년 특별추계가 발표된 이후 2년 주기로 발표되고 있음
 - 이에 2023년 12월 전국 단위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가 발표되었고, 2024년 5월에 시도별 장래인구추계(2022~2052년) 결과가 발표
- 전국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빠른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으로 50년간 약 1,545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또한,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어 2022년 17.4%였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2년 47.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시도별 장래인구추계(2022~2052년)는 인천시의 인구가 향후 10년 이상 증가세를 보이지만, 2037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결과를 제시
 - 인천시의 인구는 2022년 297.5만명에서 2037년 312.6만명으로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2년 296.4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
 - 향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의 인구감소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
 - 다만,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저출생의 심화와 유소년 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적인 충격은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인구 변화 흐름을 검토하고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인구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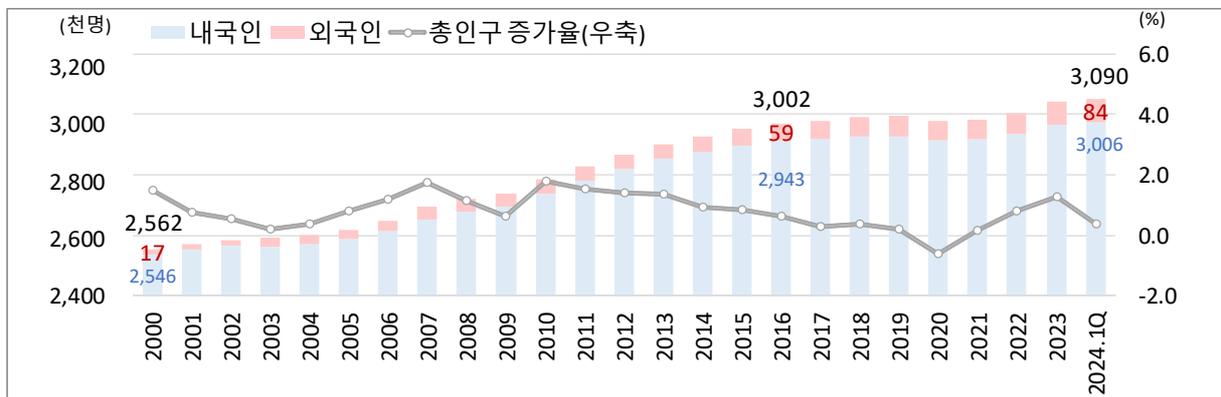
2. 인천시 인구 현황

◆ 인천시 총인구 변화

□ 인천시의 총인구는 2024년 1분기 기준 309.0만명을 기록

- 인천시의 총인구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2020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외 기간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냄
-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을 합한 총인구는 2016년 300만명을 돌파하였고, 2024년 1분기에는 주민등록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서며 총인구는 309.0만명으로 증가

[그림 1] 인천시 인구변화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 2023년 말 기준, 인천시의 인구는 특·광역시 중 서울과 부산에 이은 3위이며, 변화를 살펴보면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난 10년간 인구가 증가하였음

- 수도권 인구는 서울에서 7.2% 감소한 반면, 인천과 경기도에서 각각 5.1%와 12.0% 증가
-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모두 최근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부산은 지난 10년간 인구가 6.2%가 감소하여 광역시 중 가장 빠른 인구 감소세를 나타냄

[표 1] 전국 주요 지역별 인구 변화 비교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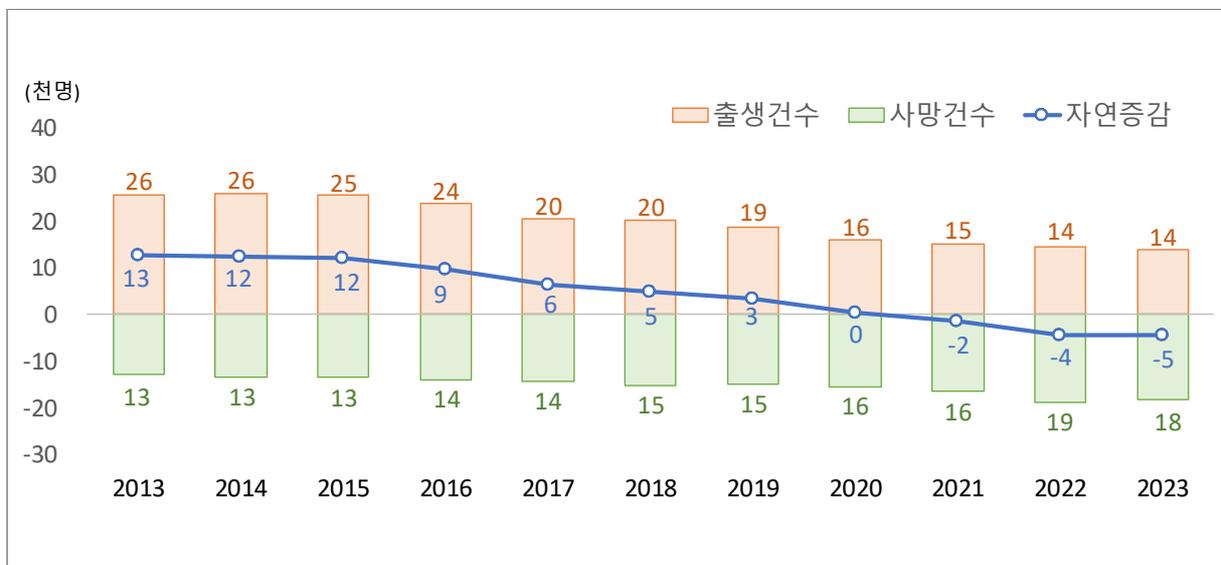
	수도권			타 광역시				
	인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2013년	2,930	10,388	12,549	3,564	2,525	1,488	1,548	1,179
2023년	3,078	9,639	14,056	3,342	2,408	1,445	1,466	1,127
변화율	5.1	-7.2	12.0	-6.2	-4.6	-2.9	-5.3	-4.4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 인천시 인구의 자연 증감

- 인천시의 인구는 추세적인 출생아 수의 감소와 사망자 수 증가로 2021년부터 자연감소가 시작
 - 2013년 2.6만명이었던 인천시의 출생아 수는 2023년 1.4만명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동기간 사망자 수는 1.3만명에서 1.8만명으로 증가
 - 추세적인 출생건수 감소와 사망건수 증가로 자연증가의 수준은 점차 하락하여 2021년 자연감소로 돌아섰고, 2023년 기준 약 5천명이 자연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인천시의 출생과 사망, 자연증감 변화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2023년 기준 인천시 인구의 자연증감률은 -1.5%로 같은 수도권 내 서울과 경기 대비 자연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부산과 대구 등에 비해서는 속도가 느림

[표 2] 전국 주요 지역별 인구 자연증감 비교(2023년 기준)

(단위: 천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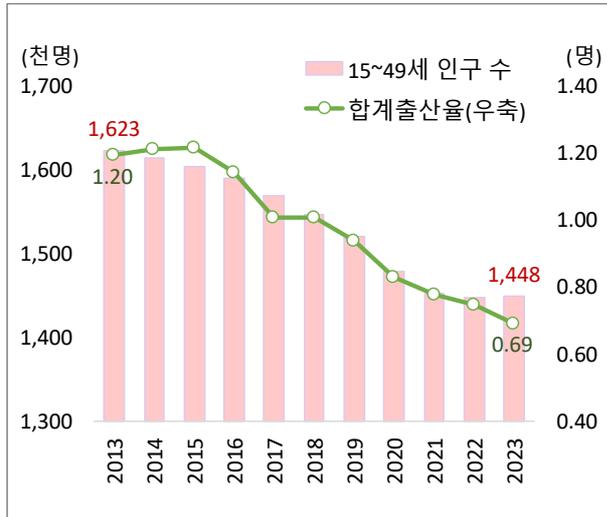
	수도권			타 광역시				
	인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자연증감건수	-4.6	-12.1	-6.2	-13.4	-7.2	-4.6	-2.7	-1.5
자연증감률	-1.5	-1.3	-0.5	-4.1	-3.0	-1.5	-1.9	-1.0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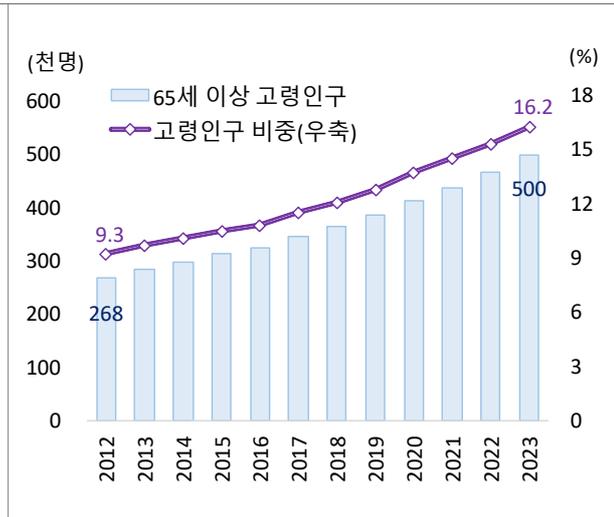
□ 인구 자연증감률의 하락은 합계출산율의 하락과 부모세대 인구 규모의 감소, 고령 인구의 증가 등에 기인

- 인천시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69로 10년 전인 2013년 대비 0.51명 감소하였고, 부모세대 (15~49세)의 인구수 또한 2013년 162.3만명에서 2023년 144.8만명으로 감소
- 반면, 고령인구는 2013년 26.8만명(인천시 인구 중 9.3%)에서 2023년 50.0만명(16.2%)으로 10년 사이 약 2배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망자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그림 3] 인천시 합계출산율 및 15~49세 인구변화



[그림 4] 인천시 고령인구 및 비중 변화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지난 10년간 수도권 및 모든 광역시에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였으나, 특히 인천시의 합계출산율은 하락이 타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 3] 전국 주요 지역별 합계출산율 비교(2023년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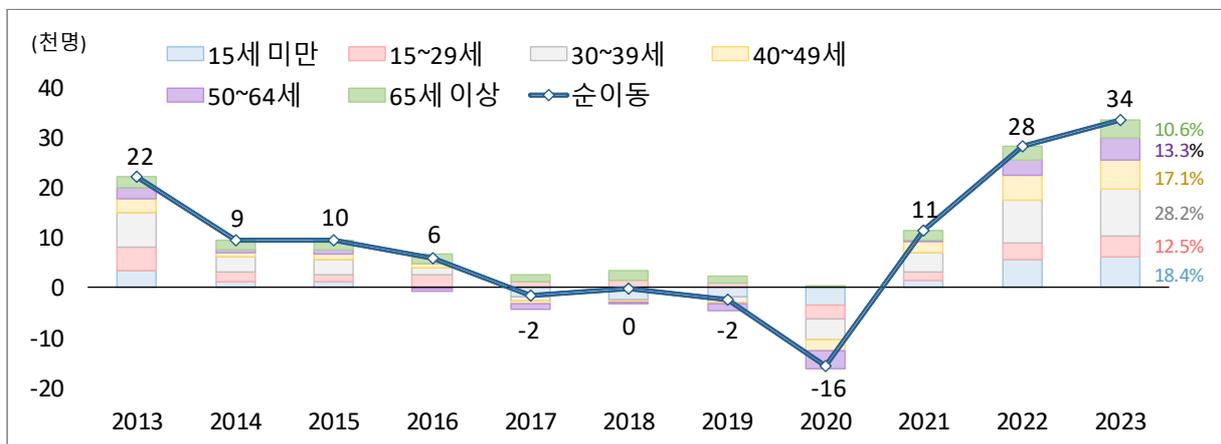
	수도권			타 광역시				
	인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합계출산율	0.69	0.55	0.77	0.66	0.7	0.71	0.79	0.81
2013년 대비 변화	-0.51	-0.42	-0.46	-0.39	-0.43	-0.46	-0.44	-0.58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인천시 인구의 사회적 증감

- 지난 3년간 30~40대 등을 중심으로 인구가 순유입되며 인천시의 총인구 증가에 기여
 - 지역간 인구 이동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시 인구가 순유출되며 총인구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2021년부터 순유입으로 전환되었고, 유입폭도 지속 확대
 - 최근 순유입된 인구는 30~4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세대의 유입으로 인해 자녀 세대인 유소년 인구 또한 함께 유입되고 있는 상황

[그림 5] 인천시의 연령별 순이동 변화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2023년 기준 사유별 순이동을 살펴보면, 주택으로 인한 순이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검단 신도시 등에서의 신규 주택공급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표 4] 2023년 기준 사유별 순이동(인천시)

(단위: 명, %)

	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순이동	33,507	1,533	7,615	23,924	-1,347	1,354	-654	1,082
(비중)	(100.0)	(4.6)	(22.7)	(71.4)	(-4.0)	(4.0)	(-2.0)	(3.2)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최근 인천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타 광역시 대비 높은 수준의 순이동률을 나타내고 있음
 - 2023년 기준, 수도권 및 광역시 중 인천과 경기에서 양의 순이동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인천시의 순이동률은 1.1%로 경기의 0.3%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

[표 5] 전국 주요 지역별 순이동 비교(2023년 기준)

(단위: 천명, %)

	수도권			타 광역시				
	인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순이동	34	-31	45	-11	-5	-9	-2	-6
순이동률	1.1	-0.3	0.3	-0.3	-0.2	-0.6	-0.2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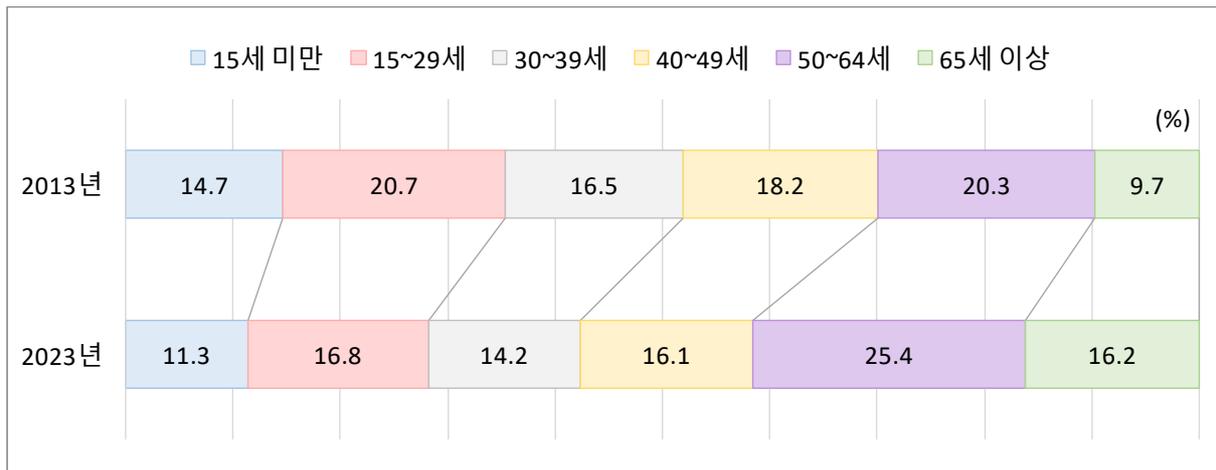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인천시 인구구조 현황

□ 인천시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40대 이하의 인구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50대 이상의 인구 비중은 증가하는 상황

- 최근 30~40대와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40대 이하 연령대의 비중은 2013년 70.1%에서 2023년 58.4%로 지난 10년간 11.7%p 하락
- 반면, 50~64세 인구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해당 연령대에 진입함에 따라 지난 10년간 5.1%p 상승하였고, 65세 이상 인구는 1차 베이비부머의 해당 연령대 진입과 평균 연령 상승 등의 영향으로 6.5%p 상승¹⁾

[그림 6]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1) 1차 베이비붐 세대는 1954~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705만명)를, 2차 베이비붐 세대는 1964~197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954만명)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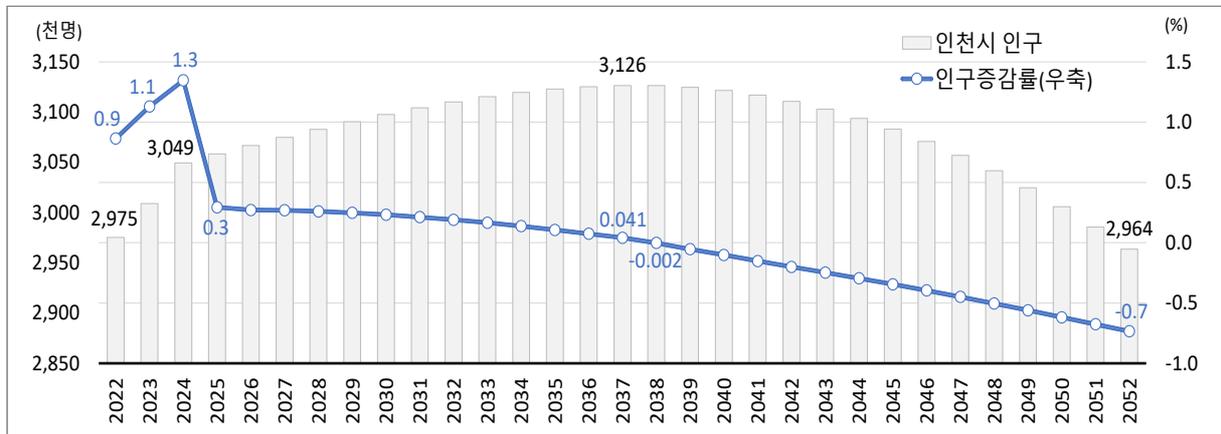
2 인천시 인구 변화 전망2)

1. 인천시 인구 변화 전망

◆ 인천시 총인구

- 인천시의 인구는 향후 10년 이상 지속 증가하여 2037년에 인구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297.5만명이던 인천시의 인구는 2037년 312.6만명까지 증가한 후 하락하여 2052년 296.4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22년 대비 0.4% 낮은 수준

[그림 7] 인천시 총인구 변화 전망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2~2052년)

- 2052년까지 인천시의 인구 감소 수준(-0.4%)은 수도권 및 타 광역시와 비교할 때 매우 작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총인구 감소로 인해 인천시가 받을 충격은 서울 및 타 광역시도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표 6] 주요 지역별 총인구 변화

(단위: 천명, %)

	수도권			타 광역시				
	인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2022년	2,975	9,421	13,690	3,303	2,372	1,470	1,472	1,114
2052년	2,964	7,935	13,812	2,451	1,796	1,181	1,250	827
변화율	-0.4	-15.8	0.9	-25.8	-24.3	-19.7	-15.1	-25.7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2~2052년)

2) 본 파트는 2024년 5월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2~2052년)의 중위추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이전 장래인구추계(2020~2050년)와 비교하였을 때, 2024년의 추계는 인구정점과 장기적인 인구 규모 등이 상향 조정
 - 2022년 발표된 추계에서 인천시의 인구는 2034년 정점에 이르고, 그 규모 또한 300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추계되었음
 - 반면, 이번 추계에서는 인구정점에 이르는 시점이 2037년으로 3년 미뤄졌으며, 정점에서의 인구수 또한 312.6만명으로 지난 추계 대비 15.9만명 상향 조정
 - 2050년의 인구 또한 추계 간 19.2만명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2년 사이에 인천시 인구에 대한 전망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음

[표 7] 지난 추계와의 총인구 변화 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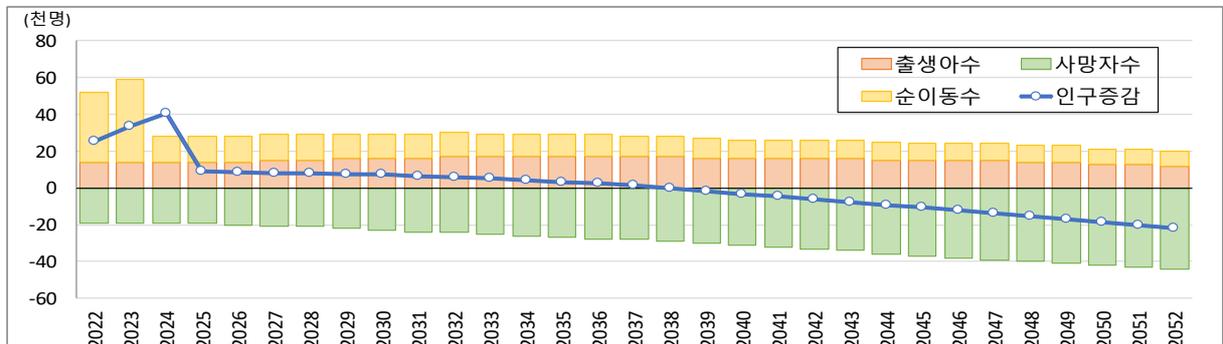
	인구정점		2050년 인구
	시점	인구수	
2022년 추계	2034년	296.7만명	281.4만명
2024년 추계	2037년	312.6만명	300.6만명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0~2050년, 2022~2052년)

◆ 인구 변동 요인

- 2024년 이후 순이동은 완만한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사망자는 점차 증가하여 총인구의 감소 전환을 야기
 - 인구 이동은 2022~2023년 평균 4만명대의 순유입을 보이지만 2024년 1.4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향후 추세적 감소를 지속하여 2045년부터 1만명 이하로 하락
 - 인천시의 출생아는 2022년 1.4만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2~2037년에 평균 1.7만명 수준을 달성하지만 이후 감소 전환하여 2052년 1.2명대를 기록
 - 사망자는 2022년 1.9만명에서 2052년 4.4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인구 감소를 주도

[그림 8] 인천시 인구 변동 요인(출생, 사망, 순이동)별 전망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2~2052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모든 광역시에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가운데, 인천과 경기도만 인구가 순유입되며 인구 감소세를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

[표 8] 2022~2052년 인구변화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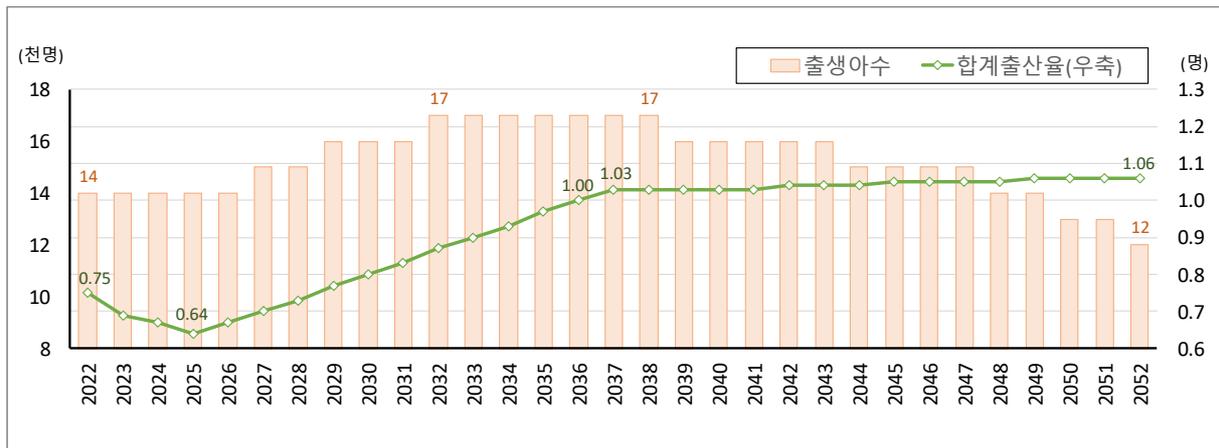
(단위: %p)

	수도권			타 광역시				
	인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누적 자연증감	-13.7	-8.8	-9.7	-20.6	-16.5	-11.5	-9.8	-14.4
- 누적 출생아 수	15.5	14.6	16.9	11.3	12.2	14.2	15.6	12.1
- 누적 사망자 수	-29.2	-23.4	-26.6	-31.9	-28.7	-25.7	-25.4	-26.5
누적 순이동	13.3	-6.9	10.6	-5.3	-7.8	-8.2	-5.2	-11.2

주: 2022~2052년 인구변화율에 각 항목이 기여한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반올림 등으로 인해 누적 자연증감과 누적 순이동 기여도의 합이 인구변화율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2~2052년)

- 인천시의 합계출산율은 2025년 저점을 기록한 후 상승하여 2036년부터 1명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22년 0.75명 수준이었던 인천시의 합계출산율은 2025년 0.64명으로 하락한 이후 반등
 - 2036년 1.00명 수준을 회복한 후 느린 속도로 상승하여 2052년 1.06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9] 인천시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화 전망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2~2052년)

- 인천시의 합계출산율 저점(0.64명)은 서울·부산 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경기 및 다른 광역시 대비 낮으며, 이후 합계출산율이 수렴하는 수준(1.03~1.06명) 또한 타지역 대비 높지 않음

[표 9] 주요 지역별 합계출산율 변화 비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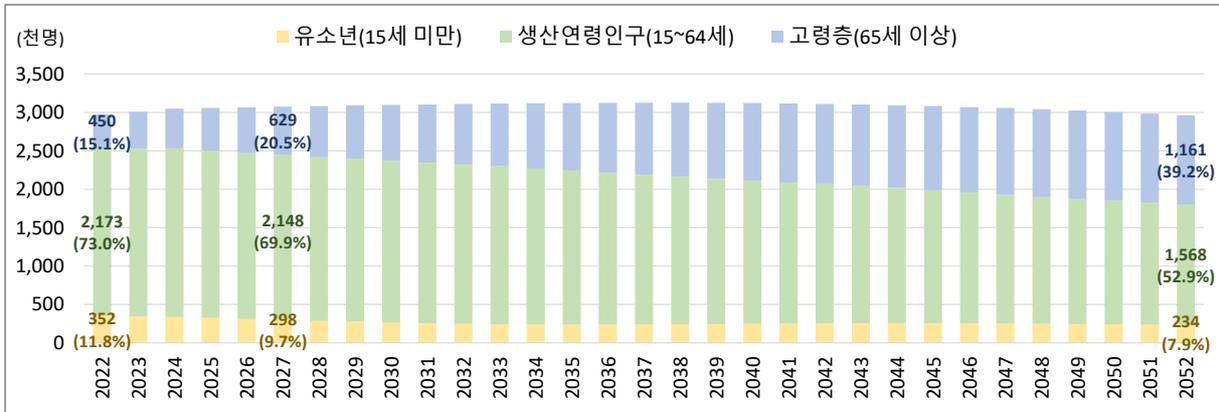
	2022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2
인천	0.75	0.64	0.80	0.97	1.03	1.05	1.06	1.06
서울	0.59	0.46	0.61	0.76	0.83	0.84	0.85	0.86
경기	0.84	0.68	0.86	1.03	1.1	1.11	1.12	1.13
부산	0.72	0.58	0.74	0.90	0.97	0.98	0.99	1.00
대구	0.76	0.64	0.81	0.98	1.05	1.07	1.08	1.08
광주	0.84	0.67	0.85	1.03	1.1	1.11	1.13	1.13
대전	0.84	0.66	0.83	1.00	1.06	1.08	1.09	1.09
울산	0.85	0.77	0.95	1.12	1.19	1.2	1.22	1.22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2~2052년)

◆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4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여 2052년에는 2022년의 72.2%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
 - 2022년 217.3만명이던 인천시의 생산연령인구는 2024년 219.5만명으로 증가하지만,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여 2052년 156.8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생산연령인구는 총인구 대비 빠르게 감소하여,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73.0%에서 2052년 52.9%로 하락
- 유소년 인구(15세 미만)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지만, 2052년에는 2022년의 66.5% 수준으로 축소
 - 유소년 인구는 2022년 35.2만명에서 2052년 23.4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1.8%에서 2052년 7.9%로 하락
- 고령인구(65세 이상)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2052년 116.1만명으로 증가
 -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기준 15.1%(45만명)를 차지하였으나 2027년 20%를 돌파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2052년 인천시의 고령인구(116.1만명)는 2022년의 약 2.6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52년 39.2%로 상승

[그림 10] 인천시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전망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2~2052년)

- 인천시의 총인구 감소 수준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인구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인천시의 고령인구 비중은 수도권 및 광역시도 중 울산과 대구에 이은 3위 수준의 속도로 상승하여 2052년 수도권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생산연령인구의 비중 또한 빠른 속도로 하락하여 2052년 수도권 지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표 10] 2052년 연령별 인구 비중 및 2022년 대비 비중 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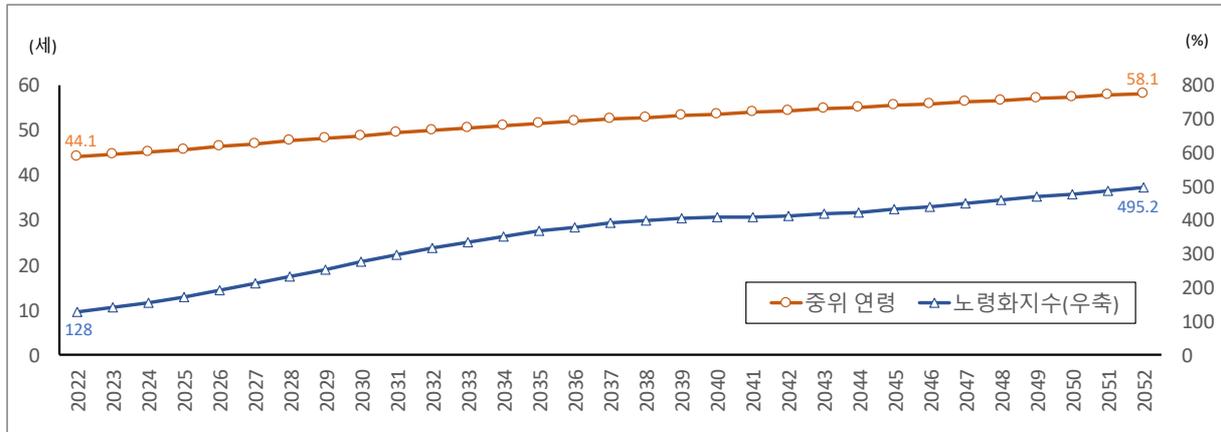
(단위: %, %p)

	수도권			타 광역시				
	인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유소년 인구	7.9 (-3.9)	7.5 (-2.1)	8.6 (-4.0)	7.3 (-3.0)	7.9 (-3.3)	8.7 (-3.9)	8.6 (-3.1)	7.2 (-5.8)
생산연령인구	52.9 (-20.1)	55.3 (-18.0)	53.9 (-19.2)	49.1 (-19.7)	49.6 (-21.2)	52.5 (-19.8)	53.6 (-19.3)	49.2 (-23.7)
고령인구	39.2 (24.0)	37.2 (20.1)	37.5 (23.3)	43.6 (22.7)	42.5 (24.5)	38.8 (23.7)	37.8 (22.3)	43.7 (29.5)

주: 괄호안의 값은 2022년 대비 비중 변화(%p)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2~2052년)

-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중위연령이 상승하고 노령화지수 또한 빠른 속도로 상승할 전망
 - 인천시의 중위 연령은 2022년 44.1세에서 2052년 58.1세로 30년간 약 14.0세 상승
 - 유소년 인구수 대비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22년 128.0%에서 2052년 495.2%로 상승

[그림 11] 인천시 중위연령 및 노령화지수 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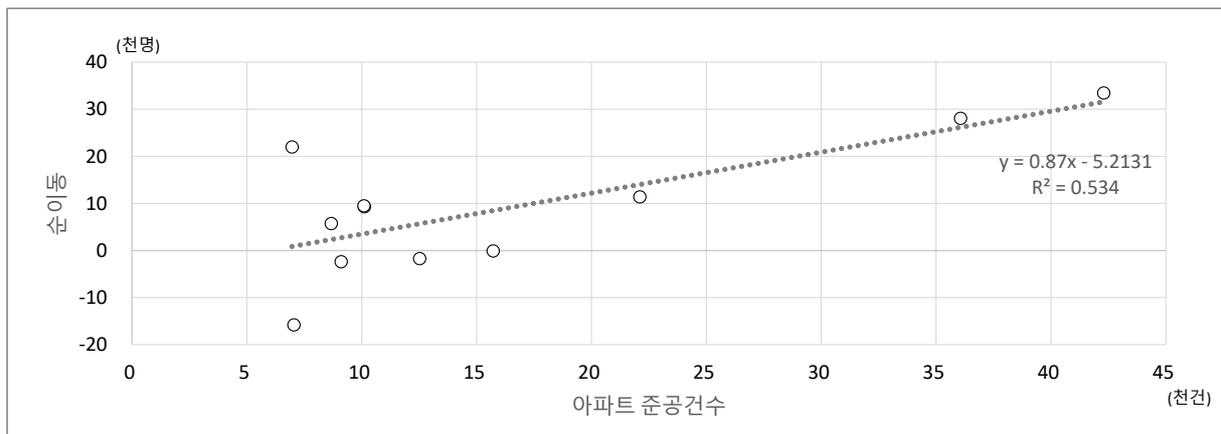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2~2052년)

2. 전망의 추가 고려 사항

- 장래인구추계에서 제시된 지역간 인구 이동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지난 10년간 인천시의 아파트 준공건수와 순이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굉장히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3기 신도시 등에서 신규주택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인구 유입 규모는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함

[그림 12] 아파트 준공건수와 순이동 간의 관계(인천시, 2013~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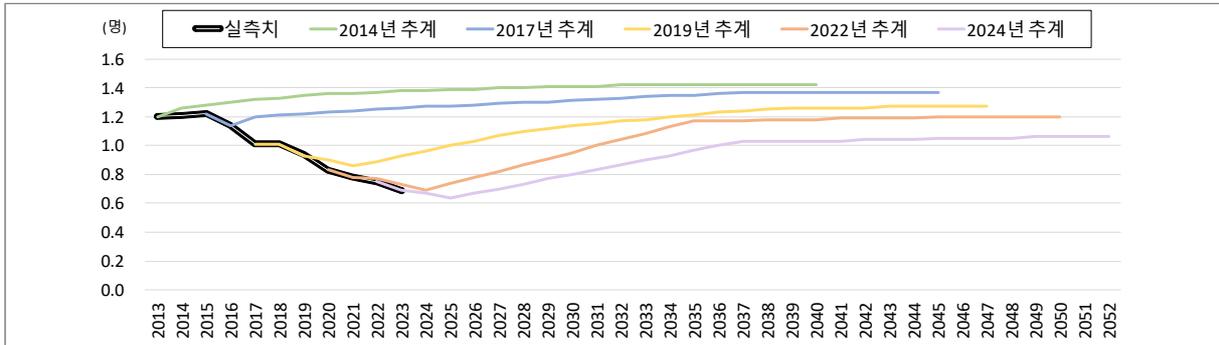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 장래인구추계는 새로운 발표마다 합계출산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되어 왔다는 점에서, 현재 제시된 합계출산율은 낙관적인 수치일 수 있음

- 합계출산율은 지난 10년간 통계청에서 발표한 추계보다 낮은 수준의 실적치가 시현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장래인구추계의 발표마다 합계출산율의 저점 및 수렴 수준이 하향 조정되었음
- 따라서, 현재 장래인구추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합계출산율 수준 또한 낙관적이며 향후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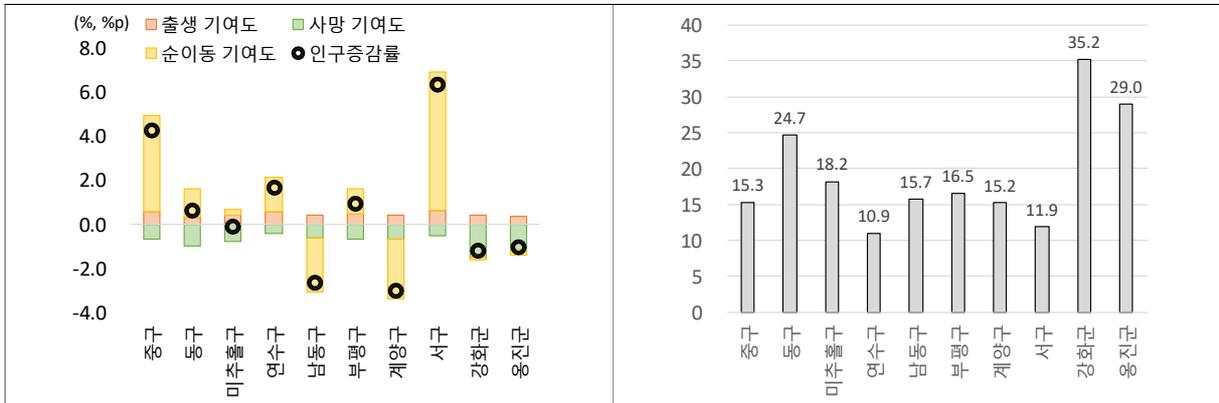
[그림 13] 장래인구추계의 인천시 합계출산율 추계치 변화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4년, 2017년, 2019년, 2022년, 2024년)

- 인천시는 향후 총인구 감소로 인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구 변화의 충격은 군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순이동의 경우 중구와 연수구, 서구 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남동구와 계양구의 인구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동구와 강화군, 옹진군 등은 높은 고령인구 비중으로 인해 사망이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인구변화의 충격은 군구별로 차별적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음

[그림 14] 군구별 인구 변동요인의 인구증감 기여도 [그림 15] 군구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주: 2022년 기준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3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방향

1. 저출생 추세 반전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 완화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정책 노력 필요

- 우리 사회의 적정인구 규모에 관한 공통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쟁의 완화 등을 위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존재함³⁾
-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인구구조 변화는, 인구가 저연령대를 중심으로 감소하여 고령화로 이어지고 경제의 성장동력 저하와 재정의 악화 등 악영향을 야기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출생·고령화가 대응하기 어려운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함
- 의료·교육·병역·노동시장과 같은 우리 사회의 경제·행정 시스템은 대부분 출생아 수가 60만명 수준이었던 시기에 구축된 것이며, 인구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시스템의 개편과 조정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음(이철희, 2018a)
- 상술한 바와 같이,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합계출산율은 장래인구추계에 제시된 것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고, 예상보다 급격한 고령화와 사회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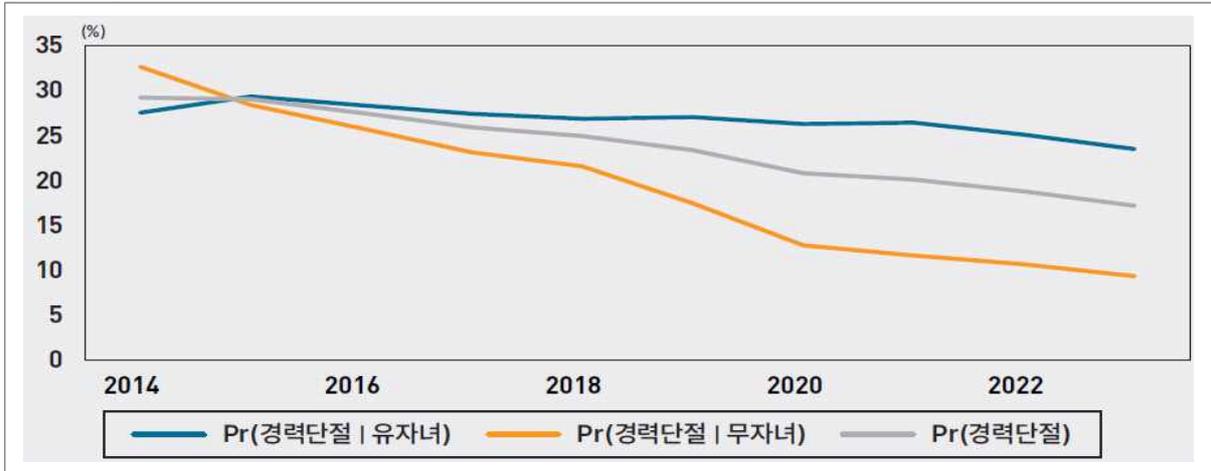
◆ 일·생활 균형 확대

□ 일·생활 균형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출산의 불이익을 제거해야 함

-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약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직장이 우선시되고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노동시장 환경은 저출생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조덕상·한정민(2024)에 따르면 자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패널티가 최근 출산율 하락의 약 4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강화되는 등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이를 극복하기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의 방지는 향후 15~64세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임

3)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예로 Wang Feng(2023) 등이 있음. Wang Feng(2023)은 인구 감소가 생태계적 관점에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쟁이 축소되고 사람이 귀해져 세계적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

[그림 16]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변화



자료: 조덕상·한정민(2024)

□ 공공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유연한 근로 환경 구축 후, 민간으로의 확산 방안 모색

- 저출생 완화를 위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일자리 환경을 구축은 필수적이며, 이에 우선적으로 공공 영역에서 일·생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 시간과 장소 등의 측면에서 유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공 영역에서 추진한 일·생활 균형 관련 사업들이 민간 부문으로 파급되도록 민·관 협력 강화 정책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적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인천시와 기업, 시민사회의 중간영역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의 확산 및 정착을 지원하는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일·생활 균형 및 출산·양육지원 제도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인센티브 발굴 노력 필요

● 지역별 육아·돌봄 지원 체계 구축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도입이 필요함

-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및 양육지원 시스템 등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목되어 왔음(최상준·이명석, 2015; 민규량·이철희, 2020; 박미경, 2022)
- 인천은 지역별로 인구 구성과 인프라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육지원 정책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인프라를 활용한 돌봄 네트워크 구축

- 신도시가 있는 서구와 연수구 등에 자녀가 있는 30~40대가 유입되며 자녀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지만 육아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 공백은 시간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돌봄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근거리에서 찾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기인함

- 따라서,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내에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부족한 육아 인프라를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아파트 단지의 주민을 돌보미로 활용하거나, 아파트의 거점 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사교육비 부담 완화

□ 학령기 자녀에 대한 교육비 부담 또한 저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경쟁교육 체제하에서 공교육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사교육 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이며, 특히 사교육이 돌봄의 기능까지 담당하면서 부모세대의 부담이 가중
- 2023년 기준 인천시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42.4만원으로 2019년 이후 4년만에 35.5% 상승하여 빠른 상승세를 보임
- 따라서 모두가 평등하게 이용 가능한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미래 세대 부모들이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없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초등 방과후 돌봄 및 중·고생 학습지원 등의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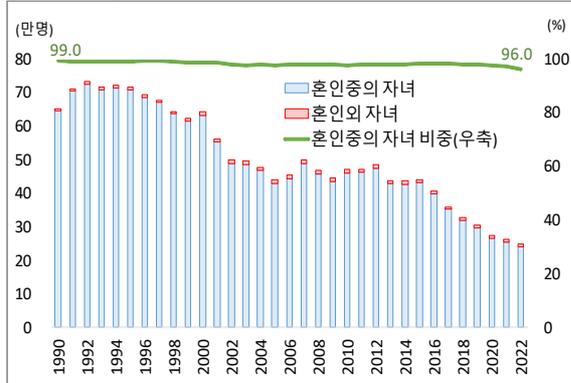
- 우선,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 등을 통해 초등 고학년이 이용 가능한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함. 이를 통해 초등 고학년에 대한 늘봄학교 도입 시기(2026년)보다 앞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고학년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초등학생 위주의 공적 돌봄시스템으로 인해 중·고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모든 청소년이 활용 가능한 공적 학습지원 및 돌봄시스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방과후 돌봄과 학습지원 측면의 부족함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혼인 장려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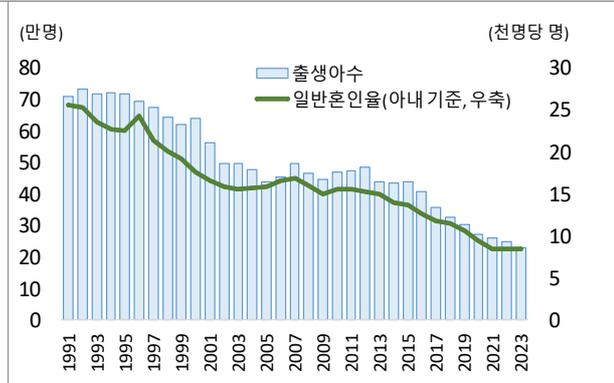
□ 저출생 완화 방안으로 청년 세대의 혼인 장려 정책을 고려해야 함

- 우리나라 출생의 95% 이상이 혼인한 부부에게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혼인은 출산의 필요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최근의 저출생 심화는 혼인 감소와 그 추세를 같이 함
- 이철희(2018b)는 유배우 비율의 감소가 2000년~2016년 사이 합계출산율 하락의 주요 요인임을 보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2023)는 코로나19 시기 혼인의 감소가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 따라서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혼인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17] 부모의 혼인상태별 출생아 비중



[그림 18] 출생아 수와 혼인율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 인구구조 및 중앙정부 변화에 대응한 거버넌스 구축

- 정부와 국회는 저출생 대응을 위하여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안을 발의
 - 당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국민의힘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등의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제출(2024.07.11.)
 -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인구 관련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인구정책의 기획과 평가, 예산 배분 및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부총리급 부처임
 - 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인구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방정부에서도 이에 발맞춰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의 인구정책 강화 추세에 발맞춰 인천시 또한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위상을 조정
 - 중앙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응하여, 현재 인구정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인구 문제는 육아·보육 환경뿐만 아니라, 주택과 일자리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운영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부시장 직속 담당관 수준 이상으로의 구성을 검토해야 함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인구정책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이후 중앙정부 계획에 이를 반영시키는 방안 모색
 - 인구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닐 수 있으나, 인구정책은 한정된 자원과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와의 연계가 중요함

-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되, 이를 추후 시행되는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

□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정책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인구 변동에 대한 이해가 낮다면 정책효과 또한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구 변동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분석이 중요함(우해봉, 2019)
- 인천시 인구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구 변동의 동향과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인천내 인구 불균형 추이를 검토하며, 인구특성 특이지역 도출을 위한 조사·분석과 지표 개발을 수행
- 인구 변화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인구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도시계획 등의 변화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운영을 제안

3. 일·학습·복지 분야별 고령화 대응

□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활용성 강화

- 고령인구가 우리 경제 및 일자리에서 차지할 비중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됨. 특히, 인천시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하여 인구 감소는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는 반면, 인구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됨
-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은 50.5세에 발생하고 법적 정년은 60세인 상황에서 증가하는 고령인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고령인구를 성별·연령별로 세부적으로 분할하여 이를 기업에서 필요한 일자리와 매칭시킴으로써 고령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기업에서 일자리의 환경 자체를 고령친화적으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또한, 이른바 ‘노-노 케어’를 통하여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과 노인 일자리에서 활동하는 노인들이 증가할 수 있는 건강한 순환시스템 마련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고령인구의 평생학습 생태계 진입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 고령인구의 현재 역량과 기업의 수요간 차이로 인한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야 함
-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여 고령자들이 새로운 노동 환경에 적응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통해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공공시설에 대한 고령층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고령층에게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고령층을 위한 복지와 통합돌봄 시스템

- 노인들을 위한 주거-복지-의료 등을 연계할 수 있는 통합돌봄 시스템이 지역사회 단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인들의 복지 수요와 생활 패턴 등을 유형화하여 서비스 제공에 활용
- 평균 수명 증가에 대비하여 고령자들을 위해 개발되는 기술이, 인천내 고령자들에게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단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함

4. 도시관리를 통한 인구 확보 역량 강화

□ 신도시 개발을 통한 사회적 인구 증가 유도

- 최근 발표된 인천시 장래인구추계 결과는 지난 추계 대비 긍정적으로 조정되었음. 예컨대, 지난 2022년 추계에서 인천시의 인구정점은 2034년 297만명으로 예측되었으나, 이번 추계에서는 2037년 312만명으로 예측되어 인천시의 미래 인구 변화에 대한 관점이 개선되었음
- 인천시의 경우 송도, 청라, 영종, 검단, 논현 등 신도시의 지속적 개발로 인하여, 이른바 ‘좋은 주거지’가 많이 생성되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인구 유입 증가가 긍정적 변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특히,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것처럼 아파트 준공건수와 순이동간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따라서, 현 인천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3기 신도시 등에서 신규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경우 인구 유입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도시 지역 역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낙후될 수 있는 만큼 지역 단위에서 도시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인구 유지와 새로운 인구 유입에 긍정적일 것임. 즉, 신도시 지역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하는가가 부정적 인구 변동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

□ 신도시 지역 도시관리 사업과 인구 변동 모니터링

- 분당, 일산, 중동 등의 제1기 신도시 지역의 인구 변동을 연구하여, 인천내 신도시 지역의 인구 변동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 제1기 신도시 지역은 아파트의 노후화와 함께 주민들의 고령화 문제도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계산지구, 연수지구 등에도 동일하게 나타남

- 인천의 경우 신도시 지역의 분포가 크고, 이 지역에서 보다 건강하게 인구 변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시관리를 지속화하는 것이 사회적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5. 군·구별 인구 불균형 대응

□ 군·구별 인구 변동과 정책 정합성 제고

- 사회적 인구 변동의 긍정적 영향을 많이 받는 중구, 연수구, 서구와 달리 남동구, 계양구 등은 최근 인구 유출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인구정책을 다르게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물론, 계양구는 제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기존과는 다른 변화를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정책 수행이 늦어질 경우, 계양구와 남동구는 기존 주민들의 주거 불편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또한 강화군과 옹진군, 동구의 경우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 고령인구와 관련된 특화된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인구 변동 충격이 큰 지역에 대한 지역 특화 정책 설정

- 동구, 강화군, 옹진군은 중앙정부의 지역소멸위기 대응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소멸위기 대응 정책은 크게 생활 인프라 공동이용 등 생활권 단위 연계·협력 활성화와 활력 증진을 위한 시책 및 특례 제도 발굴 등으로 구성⁴⁾ 동구의 경우 수도권 도시 지역이라는 이유로 교부금이나 지방세제 감면 제도에서 배제될 수 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임. 초·중·고등학교 통합 운영은 지역 내에서 제도적 설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주거플랫폼 사업, 노후주택 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이의 생활 SOC 연계 역시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정책 중 중요한 사업이며, 동구, 강화군, 옹진군에 필요한 사업임. 특히, 옹진군과 강화군 같은 섬 지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생활인구 활성화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2도 5촌 등의 사업과 연계한 임대주택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소멸위기 대응 정책은 주로 청·장년층의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함. 따라서 청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거와 일자리 측면의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소멸 위기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러한 정책이 시범적으로 동구, 강화군, 옹진군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4) 여기서 특례란 지방재정교부금 특별지원, 중소기업 지방세제 감면, 초·중·고등학교 통합 운영을 의미

▶ 참고문헌

[보고서]

김상미·유근식. (2023). 인구: 혼인하지 않는 사회와 저출산.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박미경. (2022). 저출산 대응정책의 요구도 및 우선순위 분석: MZ 세대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2(1), 33-54.

민규량·이철희. (2020). 보편적 보육료 지원정책이 여성 노동공급과 출산율에 미친 영향.

노동경제논집, 43(4).

우해봉. (2020). 인구정책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제279호

이철희. (2018a).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방향: 인구정책적 관점. 보건복지포럼 제261호

이철희. (2018b).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2000년~2016년 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경제학연구, 한국경제학회

조덕상·한정민. (2024).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KDI Focus

최상준·이명석. (2013).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정책의 효과: 광역자치단체 출산·양육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1), 93-114.

국토교통부, 각 년도, 주택건설실적통계

법무부, 각 년도,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통계청, 각 년도,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각 년도,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통계청, 각 년도, 국내인구이동 통계

통계청, 각 년도,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각 년도, 인구총조사

행정안전부, 각 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사]

Wang Feng(2023), "The alternative, optimistic story of population decline," New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3/01/30/opinion/china-world-population-decline.html>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인** 박호균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www.ii.re.kr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슈브리프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본 이슈브리프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